

## 직원들 몰래 임원만 ‘정년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도대체 제정신인가. 사측이 오는 19일 재단이사회에서 사장과 부사장, 상무의 임명 가능 나이 조건을 각각 2년 연장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년은 그대로 놔둔 채, 특정 임원들의 직책만 연장하겠다는 거다.

사측은 임원 정년 연장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며 정관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궤변’이다. 이는 조직을 위하게 아니라, 특정 인사를 위한 맞춤형 정년 연장이자 보은 인사를 위한 포석일 뿐이다.

현재 CBS 직원들의 정년은 60세다. 평생을 헌신한 직원들은 60세가 되면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사측은 정관을 고쳐 59세인 인물도 상무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상무로 임명되는 순간, 그는 직원 정년을 넘어 2년간 고액 연봉과 권력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대다수 구성원의 상실감을 자극하는 명백한 특혜이며, 신입사원 최소 채용 원칙과 경영 효율화를 외치는 사측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CBS의 부사장과 상무 잔혹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한용길 전 사장 시절의 부사장은 지역본부 소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지역본부를 '기독교 영화사업'의 전위대로 전략시키고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김진오 전 사장 체제의 상무는 콘텐츠 본부장과 경영총괄을 겸임하며 제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경영본부장이 별도로 있음에도 굳이 제작 현장 옆에 '경영의 칼날'을 들이댄 결과, 창의성은 고갈되고 자본의 논리만 횡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사장과 상무 직제는 조직의 시너지가 아닌, 사장의 친소관계에 따른 측근 챙기기용 '옥상옥'으로 전략해 왔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사회는 이번 나이 제한 연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개정으로 인해 CBS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노조는 조직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변화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함을 잃고 특정 소수를 위한 '회전문 인사'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3. 17.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